

건설소식

처분 형평성 논란 사라지나

건교부, 사후관리 시스템 올해 가동

처분기관별로 들쭉날쭉한 건설업체 제재수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발주청 등 기관별 처분의 세부 내역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지도·점검 및 사후관리 시스템이 가동되기 때문이다.

건설업체로서는 억울한 과다 처분 피해는 벗어날 수 있는 반면 처분기관에 대한 불법 로비를 통한 제재수위 약화 시도는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부실시공, 뇌물수수혐의 건설사에 대한 잇따른 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전면조사

올해부터 지자체, 발주기관별로 내려진 영업정지, 과징금, 등록 말소 등 건설업체 처분내용에 대한 정부의 전면조사가 시행된다.

이는 지난 해 5월 개정, 공포(올해 1월 1일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제 86조 3항의 건설행정 지도·감독 신설조항에 따른 것이며, 건교부는 올해 초 이를 위한 세부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설 조항은 '건교부 장관은 건설업 등록 등 관련 사무의 집행, 건설공사 감독의 실태 등 건설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점검하기 위해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 건설업체 처분은 지자체, 발주기관이 내리고 있지만 이들 기관은 건교부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고 있는 것일 뿐 실제 처분주체는 건교부"라며 "위임된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감시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법령상 지도·감독 규정이 미흡해 실효성 있는 행정처분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지만 개정 건설법 조항이 발효되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처분 적정 여부도 심사

건교부는 기관별로 내려진 처분실태뿐만 아니라 그 적정 여부에 대해서도 재심사한 후 필요할 때 시정까지 요구할 방침이다.

다만 재심사는 처분에 이은 사후적 관리수단으로 이용되는 탓에 과다·과소처분 예방효과만 발휘할 뿐 이미 내려진 처분을 되돌리는 효력은 없다.

이 방안은 최근 모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7개월 처분처럼 처분기관이 법령상 임의로 해석해 과다·과소 처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동시에 처분기관 불법 로비를 통해 건설법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할 뇌물수수, 부실시공 등의 사례에 대해 처분을 면제 받거나 과징금만으로 피해가는 행태까지 근절하겠다는 의지도 작용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지자체, 발주기관별로 건설업체 처분권이 과다·과소 행사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사후관리할 계획”이라며 “법령에 어긋나는 제재에 대해서는 일단 해당기관과 협의해 조정하되 필요하다면 추가적 강제수단은 물론 처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대책까지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실공사 원인조사 내실화

영업정지 등의 처분대상을 선별키 위한 사고 원인조사도 내실화 된다.

건교부는 오는 5월 말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되는 사고조사위원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에 따라 운영될 위원회는 중대 재해 발생현장의 사고원인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중복 조사로 인한 건설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와 노동부 주관의 중대 재해 발생 현장조사는 통합·운영하는 방향으로 조율됐다.

사망 1명, 부상 2명 이상이 발생한 현장에 적용되는 노동부 주관의 현장 조사에 사고조사위원을 파견·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건교부가 넘겨받아 별도 관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건교부 본부 차원의 별도 사고조사위를 구성, 정밀조사한다.

또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 시설물 사고라도 원인규명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고조사위가 개입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고조사위의 1차 역할은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리는 것”이라며 “그러나 부처간 이견 속에 적기에 취합되지 못한 건설현장 사고 및 처분내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건교부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처분 형평성 부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제시 기능도 발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입찰 수수료 없애라

정부, 지자체 조례 폐지 공고

정부는 전자입찰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조

례폐지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특히 정부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상위법을 개정해 징수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행자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그동안 지속적인 폐지 요구로 지자체의 전자입찰수수료 징수 관행이 많이 개선 됐지만 아직도 일부 지자체의 수수료 징수가 여전히 있다고 판단, 조례폐지를 적극 권고·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폐지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례폐지를 유도하되 정부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수 근거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단 해당 조례폐지를 유도하되 안 되면 상위법을 개정,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련업체에 따르면 전체 246개 지자체 중 30여개 지자체가 여전히 전자입찰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해당 지자체는 전자입찰로 행정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도 입찰수수료를 거둬 건설업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업체수 양산으로 수주경쟁이 심화돼 소규모 일반공사의 경우 1건 공사에 수백개, 전기·정보통신공사는 1,000개 이상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

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직까지 전자입찰수수를 걷고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지자체들로 쉽게 재정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징수를 포기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는 건당 1만원 가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사이에서도 여전히 징수를 고집하는 경우도 있고, 지역업체 등의 반발에 밀려 폐지를 적극 검토하는 등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공정거래조정제 시행

공정위, 오는 2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설립을 허가하고 오는 2월부터 불공정거래 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조정원은 10명 내외의 상근인력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며 향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한 해결을 전담한다.

조정제도는 대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각종 비용을 부당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더라도

원·하도급자간 보상 등의 합의를 거쳐 조정한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면제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다만 제도악용 여지를 막기 위해 조정제도 적용대상을 시장경쟁에 미칠 영향이 적고 사전분쟁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 사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상생협력 전담부서 신설 바람

공정거래 협약 체결이 불지퍼

최근 건설업체들이 원·하도급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업체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상생협력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외주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생협력 전담부서를 앞다퉈 신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확산되고 있는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 체결이 상생협력 전담부서 설치에 불을 지피고 있다.

롯데건설의 경우 지난 해 말부터 상생협력 업무를 지원하고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및 상담 등을 지원하는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대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등도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

치키로 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협력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 설치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영업력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대우건설은 외주구매본부를 신설했다.

경영지원과 외주구매로 구성돼 있던 경영관리본부를 경영지원본부와 외주구매본부로 따로 분리한 것이다.

외주구매 업무의 특성상 경영지원 본부에 속해 있는 것보다 별도로 분리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대우건설은 설명했다.

또한 지난 해 부터 한층 고조된 상생협력의 분위기도 외주구매본부 신설에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키 위해 외주구매본부를 신설했다”며 “외주구매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부서 신설에 여유가 없는 다른 건설사들은 현재 외주부서 내에 외주기획 담당자들을 별도로 배치하고 협력사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담부서 설치로 상생협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협력사 지원 방안에 대한 새

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발주공사 하도급관리 강화

중기청, 대금 직접지급 등 추진

앞으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하도급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주택공사,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대형 공공공사를 발주하는 13개 주요 공공기관은 공사를 수주한 원사업자들의 부당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기로 했다.

이는 중기청이 중소기업의 수익성 향상과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건설용

자재·설비·제조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중기청은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 하도급 계약공정성 확보, 납품대금 지급관리 강화, 납품받은 물품의 공정한 검사,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하도급관리 가이드라인 및 지침 제정, 계약특수조건 제정, 상생협의회 구성, 불법하도급 신고보상제 실시, 직불특약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하도급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 이를 특수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상생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인센티브 및 제재방안 등도 마련했다.

가스공사는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사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도록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안을 시행하며, 주택공사는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하는 등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원사업자의 하도급 계약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고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대형 건설공사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계약 및 주요 건설업체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향후 이들 기관 외에 대형 건설공사를 빈번하게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에 대해서도 하도급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사
성어

焦眉之急(태을 초, 눈썹 미, 어조사 지, 급할 급)

‘눈썹에 불이 붙은 급한 상태’란 뜻으로, 아주 위급한 상태를 이르는 말

불혜선사(佛慧禪師)는 고승이다. 그의 수행은 당대의 어느 고승보다 뛰어나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한 그가 왕명을 받고 대상국 지혜선사라는 절에 주지승으로 임명되었다. 어명을 받고 그는 사문을 불러 모아 물었다.

“내가 왕명을 받들어 주지로 가는 것이 옳으나, 아니면 이곳에 눌러 앉아 불도에 정진함이 옳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러자 선사는 붓을 들어 계(偈)를 썼다. 사르르 눈을 감더니 앉은 태 입적해 사문을 놀라게 했다.

선사는 살아 있을 때 사문으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고 답해주었다. 어느 날 한 사문이 물었다.

“선사님 이 세상에서 다급한 상태가 많을 것입니까, 어느 경지가 가장 다급합니까?”

“그것은 눈썹을 태우는 일이다.”